

보 도 자 료			
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	보도일시	2019년 12월 23일 석간 (12. 23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	신보미 과장 / 김민정 사무관 / 최승연 사무관 02-2131-2030, 2036, 2033
		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	남동경 과장 / 김선욱 사무관 02-2131-2020, 2022
		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	김성기 과장 / 하상덕 사무관
			02-2133-2580 / 2586
	배포일시	2019. 12. 22. 17:00 / 총 7매	

용산공원,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내딛다

- 23일 총리급으로 격상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
-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임명
- 첫 회의에서 ①용산공원구역 확대, ②용산공원 조성 본격공론화 착수, ③용산기지 일부 시민개방, ④부지내 주요시설물 관리방안 등 논의

□ 관계부처는 12.23(월) 이낙연 국무총리 및 민간공동위원장(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) 주재로 열린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*(이하 위원회)에서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고 아래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.

① 용산공원 구역을 약 243만㎡→약 303만㎡으로 약 60만㎡ 확장

* 舊방위사업청 부지 약 7.3만㎡, 군인아파트 부지 약 4.4만㎡,
국립중앙박물관 약 29.5만㎡, 전쟁기념관 약 11.6만㎡, 용산가족공원 약 7.6만㎡

② 용산공원 실행계획 공론화에 본격 착수하여 전문가 보완,
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용산공원의 밑그림 완성 추진

③ 용산기지 내 외인아파트 부지를 대국민 공개하고 버스투어를
확대발전시켜 국민의 성과체감 제고

④ 용산기지 내 시설물 기본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존치가
필요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

제1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 결과

I. 주요 논의사항

1 용산공원 경계 확장

- ☐ 먼저, 온전한 영토 회복을 통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- ☐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. 또한 용산기지 인근의 중앙박물관, 전쟁기념관,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로 편입된다.

* 경계 확장을 반영하여 '20년 이후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예정

- ☐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-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,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2 공론화를 통해 용산공원 실행계획 확정

- 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이다.
- ☐ 먼저 1단계('20.1월~6월)로 조경·환경·건축·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, 2단계('20.7월~12월)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.
- 마지막 3단계('21.6월)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.

- 기지가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.
- 먼저,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('86년~'19.11월)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'20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*으로 개방한다.

*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, 작은 도서관,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

《 외인아파트 위치도 및 시설 현황 》



- 또한 기지 내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버스투어*를 확대 발전시켜 미래세대,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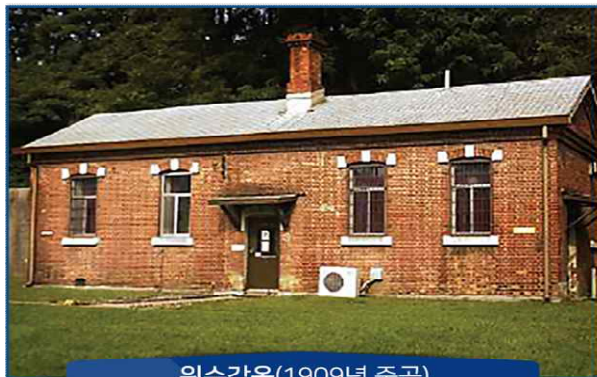
* (실적) '18.11~'19.12(14개월) 기간 총 41회(2,684명) 시행, 평균경쟁률 6.5:1

4

공원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

-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보안상 이유로 시설물의 외관 육안조사만 허용되었으나,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빈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내부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.
-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, 2단계로 내년 7~9월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한다.
-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0~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.

《 용산기지 내 주요 역사적 시설물 》



Ⅱ. 용산공원 조성 기대효과

① 희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.

- 과거 약 115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 민족의 자긍심 회복

② 단절된 자연생태계가 복원됩니다.

- 공원 구역 북측 부지를 신규로 공원에 편입시켜 그간 단절되었던 남산-한강 녹지축을 회복

③ 대규모 녹지로 돌려드립니다.

- 용산공원 조성시 약 15만 그루의 나무 식재 효과, 연간 약 61만 명이 숨 쉬는 공기 생산 효과, 연 6톤 미세먼지 흡수 효과 발생

④ 더 넓어진 공원으로 돌려드립니다.

- 인근의 부지를 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여 용산공원을 약 60만㎡ 확장

* 舊방사청 부지(약 7.3만㎡), 군인아파트 부지(약 4.4만㎡),
국립중앙박물관(약 29.5만㎡), 전쟁기념관(약 11.6만㎡), 용산가족공원(약 7.6만㎡)

⑤ 최초의 국가공원이 탄생합니다.

- 통상 공원조성·운영은 지자체 업무이나,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,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

Ⅲ. 위원회 개요

1 운영 근거

- ☐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*, 용산공원 조성 추진방향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·의결

* 위원장(국무총리·민간위원장 공동)을 포함하여 30인 이내(정부 9명, 민간 21명)

2 운영 체계

- ☐ (위원 임기) 1기 위원회는 '21.12월까지 2년간 활동
- ☐ (개최 주기)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하되,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
- ☐ (분과위 운영)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4개 분야별로 분과위 설치

* 분과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, 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

- ☐ (관계기관 협의체 운영) 부처간 이견에 대해 사전 조율

* (구성) 국조실, 국토부, 기재부, 국방부, 행안부, 외교부, 환경부, 서울시 등

3 주요 심의사항

- ☐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
- ☐ 용산공원 경계 지정 및 변경
- ☐ 용산공원 조성 종합계획(마스터플랜) 및 실행계획(액션플랜)
- ☐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 성과체감 방안
- ☐ 용산공원 내 주요 시설물 관리방안

(위원은 가나다 순)

성 명	주요 경력
유 흥 준 (민간위원장)	▪ 명지대 석좌교수
강동진	▪ 하야리아공원포럼 대표
강옥희	▪ 한국관광공사 부사장
강정은	▪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
김기만	▪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장
김아연	▪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
김준선	▪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
박소현	▪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
사공희	▪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
신주백	▪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
유종숙	▪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
이선우	▪ 한국갈등학회 고문
이은택	▪ 아시아채널 대표
이은희	▪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
정진혁	▪ 대한교통학회 부회장
최경숙	▪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
최재천	▪ 생명다양성재단 이사
최혜영	▪ 한국조경학회 이사
한상경	▪ 아침고요수목원 대표
함인선	▪ BHW 건축도시연구소 대표
허재완	▪ 중앙도시계획위원장